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30

제출년월일 : 2024. 9. 9
발 의 자 :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박은경, 이진분, 이지화, 이대구, 유재수, 설호영, 선현우, 황은화, 박은정, 김진숙, 최진호, 한명훈, 최찬규, 송바우나, 이혜경, 김유숙, 한갑수 의원(20인)

1. 주 문

○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7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주요 피해자 중 어린이·청소년·학생이 다수 있는바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되면서, 학교에서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피해 학교 학생 및 교사들은 피해자가 아닐까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소극적인 대처로 대응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에 안산시의회는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 성범죄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경찰청,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학교 내 불법합성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의 보호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2019년 14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7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합성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이제는 학교에서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도 피해 현황은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내 중, 고교 피해 학교명이 거론되면서 관련 학생, 교사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도 피해자가 아닐까,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경찰과 협업을 통해 피해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피해사실을 도교육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으며, 피해 학교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게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를 모아서 즉각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경찰청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피해자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

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

2024. 9.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